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액 10조 돌파

지난 18일 하루 동안 전국 78만여 가구 '지역상품권·선불카드'로 신청 1598만395가구 신청·수령, 전체 지급대상 74%... 지급 시작한지 15일만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지 15일, 일반 가구로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지로는 8일 만이다. 지난 18일 하루 동안 전국 78만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받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 1598만395가구다. 신청액으로는 총 10조220억9500만원이다.

전날 같은 시간(1426만1313가구, 8조9121억8600만원)보다 171만9082가구, 1조1099억9000만원 증가했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73.6%, 전체 14조2448억원 예산 중 70.4%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셈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일반 가구는 1주 뒤인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했다.

특히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이 시작된 첫 날인 18일에만 78만 6427가구가 두 가지 형태로 지급 받았다. 지역상품권 41만7980가구, 선불카드 36만2662가구다.

18일 신규로 신청한 가구 중에서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받는 가구를 뺀 나머지 73만8440가구는 신

용·체크카드도 충전받거나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신청·수령한 가구는 총 1233만 9869가구로 늘었다. 현금으로 받은 가

구는 285만9884가구가 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다 못 쓰면 잔액은 정부가 환수한다. 모바일 지역상품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이 지역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사용이 유효하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나 조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기간을 넘어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주민 의견 듣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세종시 한솔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창구를 찾아 신청상황 등을 점검하던 중 한 주민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정부, 3년마다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앞으로 3년마다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라 정부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시민사회 발전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심의위원회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의 수도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뉴시스

국회의장 후보 선출 민주당 내 교통정리 이뤄지나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등록 첫날 박병석·김진표 모두 '보류' 지난 18일 저녁 회동서 '추대 vs 경선' 방식 상충 입장 확인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등록이 19일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물밑경쟁을 벌여온 6선의 박병석 의원과 5선의 김진표 의원은 지난 18일 저녁에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박 의원은 김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등록 첫날 등록을 보류했다.

김 의원은 회동 다음날인 이날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20일 오전 중까지 최종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고만 밝혔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전날의 회동에서 확인한 서로의 입장을 토대로 여전하고

심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불출마로 비치는 것은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 불출마로 가닥이 잡혀간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오늘도 등록 안 한다"며 경선에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움직임을 지켜본 다음 입장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전날 회동에서 경선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전반기

에 선수가 앞서는 박 의원이 추대 방식으로 국회의장을 하고 후반기에 김 의원을 밀어줄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측은 선수가 고려했던 관례

와 더불어 충청 지역구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면 대선 국면에서 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책임자임을 주장해왔다.

이에 맞서 김 의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당정청을 두루 경험한 '경제통'이 국회의장을 하면 코로나19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당내에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거대 여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은 안 좋게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간의 관례 등을 고려할 때 박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대하고 김 의원은 후반기에 추대하지는 의견

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뉴시스

“고3 등교수업 시작... 힘 모아야”

정 총리 “코로나禍 경제 위기 극복 속도감 있게 추진 경비 노동자 폭언·폭행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내일 고3 학생들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한다”며 “정부와 학교, 가정이 힘을 모으면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등교 개학과 관련,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지만 현재의 지역감염 상황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방역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해주길 바라며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자가진단과 마스크 상시 착용, 상호 접촉 최소화 등을 준수하도록 잘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발생한 지역감염은 다행히 안정되고 있지만 다소 느슨해졌던 우리에게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줬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활동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지침도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빠르게 경제위기 극복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했다.

지난달 취임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약 48만명이 줄어 의원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5월 초 하루 평균 수출액도 작

년 같은 달보다 약 30% 감소했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제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해 규제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 고용안정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과제의 후속 조치 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해주고 코로나19로 달라진 정책환경과 우선순위를 반영해 국정과제도 점검·보완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견이 있는 당면 현안 과제들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겠다”며 “내일 앞대 노동과 경영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시작한다. 정부는 모든 경제사회 주체가 지혜를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입주민으로부터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위로도 전했다.

그는 “대다수 경비 노동자들은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겪어도 하고 등 불이익을 걱정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경비 노동자 등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빠르게 경제위기 극복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했다.

지난달 취임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약 48만명이 줄어 의원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5월 초 하루 평균 수출액도 작

김태년 “전두환 씨 사후에도 추징할 길 열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전두환 씨 사후에도 추징할 길 열렸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이 더 이상 거짓된 주장을 하지 않도록 5·18 역사왜곡 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

야겠다. 1000억원 넘는 추징금도 환수할 방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진실을 고백할 때만 용서와 화해의 길도 열릴 것”이라며 “전두환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범죄를 인정

하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전씨는 5·18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의 주범, 5·18 둘러싼 가짜뉴스의 온상이기도 하다”며 “5·18 북한 개입설 원조도 당시 전두환 친군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학살의 주범이 활개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위 활동이 과거처럼 미완으로 끝나지 않게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전씨는 5·18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의 주범, 5·18 둘러싼 가짜뉴스의 온상이기도 하다”며 “5·18 북한 개입설 원조도 당시 전두환 친군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학살의 주범이 활개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위 활동이 과거처럼 미완으로 끝나지 않게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